정원 1만명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국민안전처 출범

정부조직개편…17부 3처 18청 2원 5실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로

안행부→행자부로…기능·조직 축소
인사혁신처, 공무원 연금 개혁 추진
호남 등 권역별 119특수구조대 신설
고위직 12명 늘어…승진잔치 비난도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직제를 의결했다.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조직법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제는 19일 0시부터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인 장관급 국민안전처가 정원 1만45명의 거대 조직으로 출범하게 됐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가 신설되고, 총리실 소속으로 출범하는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총리 소속 국민안전처는 차관급인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로 구성된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각각 소방총감과 치안총감이 차관급 본부장을 맡아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행사한다.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119 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해상의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각각 확대하고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또한,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호남119특수구조대, 동해특수구조대, 서해특수구조대를 내년부터 추가로 신설할 계획이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이관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단속 등 해상 사건의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도 국민안전처로 이관, 항만과 연안 VTS 기능을 일원화한다.

대규모 재난 때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총리실에 신설되는 인사혁신처는 안행부 인사실 이관 인력 431명과 증원 인력 등 483명으로 출범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윤리·복무·연금 기능을 이관 받아 민·관 유착 관행 등 공직사회 부조리를 개혁하고 국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추진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부로 축소돼 정부조직·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정부 서무기능을 맡는다. 인력은 3275명에서 2655명(본부 814명, 소속기관 1814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정부조직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개편됐다.

정부조직개편으로 국가직공무원은 740명이 늘어났고, 고위공무원단 이상 직위만 12개가 늘어났다. 당장, 국민안전처장은 장관급 위상이 부여된 것은 물론 차관급 직위도 세 자리나 된다. 행정 조직은 '특수재난실'처럼 신설되거나 기획조정실처럼 상향된 조직을 포함 3실, 8국, 15과가 순증됐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가 고위 공무원들의 '승진잔치'를 벌여주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국민안전처로 옮기는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 간부 공무원들은 승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부 조직 개편이 공무원 승진 잔치와 조직 확대로만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조직 운영 '소프트웨어'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1만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탄생한 국민안전처는 현장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취약한 재난 대응 전문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간판 내리는 해양경찰청 18일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철거된 해양경찰청 간판이 바닥에 놓여있다. 세월호 참사 구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창설 61년만에 해체되는 해경은 오는 19일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편입된다. /연합뉴스

군·삼성 출신 영입 공직사회 대혁신 의지
TK 우대 여전…연말 총리교체 등 개각說

장차관급 11명 인사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단행한 장차관급 인사는 안전·재난체계의 강화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 양날개를 앞세워 국가대혁신을 추진함으로써 한층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가안전처·인사혁신처 앞세워 '국가혁신' 시동=범정부 재난관리컨트롤타워격인 국민안전처 초대 장·차관에 작전통 군인출신을, 공무원 인사를 전담할 인사혁신처장에 민간출신 인사 전문가를 각각 투입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대대적 혁신을 예고했다. 우선 국민안전처의 초대 수장으로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해군3함대 사령관과 작전 사령관을 역임하면서 해상작전 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작전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또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내정된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은 삼성SDS 인사지원실장과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인사팀장(전무)을 지낸 민간기업 인사 전문가다. 외부 민간전문가의 수혈을 통해 공무원 인사의 대대적 혁신을 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TK(대구·경북) 우대 여전=이날 발표된 11명 중 3명이 TK 출신이었고 서울·경기·충남 출신이 각 2명, 충북과 전북 출신이 각 1명이었다. 또 성균관대 출신이 2명이나 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내정자와 황부기 통일부 차관 내정자가 그들이다. 고려대 출신도 정재찬 공정위원장 내정자와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내정자 등 2명이었고, 나머지는 해사·육사·대구대·동국대·서강대·한양대·단국대 등 1명씩이었다. 특히 서강대 출신인 장명진 방사청장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지난 1970년에 함께 입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집권 3년차 대비 개각론도 가시권=정치권과 관가에서는 박 대통령이 집권 3년차에 즈음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홍원 국무총리 교체 등을 포함한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 국정을 일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권에서 제기되는 개각론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신설, 교육·사회·문화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직(사회부총리) 신설 등이다. 특히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고, 내각은 총리를 정점으로 양 날개에 경제·사회부총리가 포진한 삼두체제로 재편된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거느린 총리는 국가안전시스템 개조 및 공직사회 개혁 과제를 이끌고 가야 하는 만큼 총리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지고 사의를 표했던 점도 총리 교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큰 상태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내에서 차기 총리 후보로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도 주목된다. 이완구 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삼두체제가 집권 3년차 친정체제 내각을 완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안전처 장관 등 정무직 인사 프로필

직위	이름	경력·학력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62·경기)	전 합참차장(해군대장) / 경희고/해군사관학교 28기 / 주요경력: 2003년 3함대 사령관, 2004년 해군 전투발전단장(소장), 2005년 해군 교육사령관(중장), 2006년 해군 작전사령관(중장)
국민안전처 차관	이성호(60·충북)	안전행정부 제2차관 / 중경고/육군사관학교 33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조송래(57·경북)	소방방재청 차장 / 검정고시/대구대 / 행정학과간부후보 4기
국민안전처해양경비안전본부장	홍익태(54·전북)	경찰청 차장 / 중대사대부고/동국대 / 경찰행정학과간부후보 32기
인사혁신처장	이근면(62·서울)	삼성광통신 경영고문 / 중동고/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공정거래위원장	정재찬(58·경북)	전 공정위 부위원장 / 경북고/고려대 / 경영학과행시 21회
통일부 차관	황부기(55·경북)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 경안고/성균관대 / 행정학과행시 31회
행정자치부 차관	정재근(53·충남)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 / 대전고/고려대 / 행정학과행시 26회
방위사업청장	장명진(62·충남)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 대전고/서강대 전자공학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상률(54·서울)	숙명여대영어영문학부 교수 / 대일고/한양대 영어영문학과/뉴욕주립대 박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인수(50·경기)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 수성고/단국대 / 행정학과행시 29회

연합뉴스